

## 국제법 개론 기출 문제 2026.4.4.시행

### 총평

- 1.2025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변별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조약원문 출제 빈도가 높다. 조약법협약, 외교관계협약, 해양법협약, 국가면제협약, 남극조약 등 조약에서 출제된 경우 원문이 출제되었다. 난도 상향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 3.핵무기제한관련 문제는 그동안 임묵적으로 출제에서 배제된 테마인데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도 처음 출제되었다.
- 4.판례는 2025년에 비해 적게 출제되었다. 보통 5개 정도 출제되는데 2026년에는 한개만 출제되었다.
- 5.국제경제법 역시 축소 출제되었다. 보통은 2문제정도 출제되는데 한 문제만 출제되었다. 국제경제법 역시 난도 상향을 위해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개도국 우대 규정이 출제되었다.

### 2027년 대비 방향

1. 국제법의 거의 전범위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전 범위를 고르게 공부한다.
2. 조약문장 출제 빈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필수조약 위주로 조약문 공부를 한다.
3. 판례가 축소되었으나, 난도 상향을 위해서는 판례가 폭넓게 출제될 수 있으므로 판례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기출논점이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논점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다.
5. 전 범위 커버를 위해 단권화를 하고 반복한다.
6. 조약문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므로 조약공부와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본다.
7. 패캠반(주말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논점과 고난도 논점 혼련을 한다. 패캠반은 실강반이나 수강생에게 복습동영상이 제공되므로 복습동영상 학습을 통해 실강반과 거의 유사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패캠반은 26년 7월 또는 9월에 개강할 예정.

### [해설]

- 1.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6년 9급>
  - ①「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②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 ③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정답:②

해설:

①[O]. 38조 1항에는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 학설과 판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원의 재판준칙을 규정한 것이지, 연원간 위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②[X]. 조약이 신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O]

④[O]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①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를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②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X]. 조약법협약 제8조에 의하면 조약체결의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에 관한 행위는 그 국가에 의하여 추후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가의 추인이 있는 경우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O]

③[O]

④[O]. 조약법협약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전권대표를 한 사람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9급>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

④ 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X].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조약의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이 경우 조약의 가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O]. 국가에 대한 강박은 조약의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조약의 가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X]. 국가대표의 부정의 경우 가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분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협약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a)당해 조항이 그 적용에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b)당해 조항의 수락이 전체로서의 조약에 대한 1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를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던 것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며 또한, (c)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④[X]. 기만의 경우 조약의 가분성이 인정되나, 역시 협약 제44조 제3항에 규정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9급>

①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국가대표자가 증인의 자격으로 타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국가가 타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결석한 행위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국가가 면제를 원용하거나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타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면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

①[X]. 국가가 타국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즉, 면제의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X]. 증인자격으로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면제의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X]. 면제를 원용하기 위해 출석한 경우 면제의 묵시적 포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O]. 국가가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국제협정이나 서면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이는 면제의 명시적 포기에 해당하므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26년 9급>

①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④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정답:①

해설:

①[O]. 외교관이 소를 제기한 경우 면제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반소에 대해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X].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은 면제가 제한된다. 따라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패소한 외교관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③[X]. 협약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접수국은 그 법률에 따라 파견국이 공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관지역을 접수국의 영토에서 취득함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견국이 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조하여야 한다.

④[X]. 협약 제45조에 의하면 2개국 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또는 공관이 영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무력충돌의 경우에라도, 공관의 재산 및 문서와 더불어 공관지역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①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②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③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④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정답:③

해설:

①[O]

②[O]. 협약 제98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제공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③[X]. 협약 제108조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선박에 의하여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행하여지는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또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마약이나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거래의 진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마약 단속의 경우 '기국주의'가 적용된다. 즉, 보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④[O].협약 제94조 제1항의 규정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7.«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6년 9급>

①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②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③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④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정답:③

해설:

①[O]

②[O]. 영해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집행할 수 없으나,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

③[X]. 내수를 떠나 영해를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된다.

④[O]

8.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6년 9급>

①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②「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④상설국제사법재판소(PC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①

해설:

①[X].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불간섭의무 등은 UN헌장 제2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O]

③[O]. 헌장 제2조 제7항 단서규정이다.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내문제에 간섭할 수 있다.

④[O]. PCIJ는 독일의 베르사유조약 체결이 독일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9.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6년 9급>

- ①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 ②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 ③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④「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정답:④

해설:

- ①[O]
- ②[O]
- ③[O]

④[X].협약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

10.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6년 9급>

- ①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 ②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 ①[O].협약 제63조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 ②[X].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한다.
- ③[O]
- ④[O]

11.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9급>

- ①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 ②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 ③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 ④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 ① [X]. 5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 ② [X]. 총회는 안보리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고'할 수 없다.
- ③ [X]. 헌장 제19조에 의하면,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회원국의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 ④ [O]

12.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9급>

-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행위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 ②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③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④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 ① [X]. 국제관습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 ② [X]. 칼보조항은 외국인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 ③ [O]
- ④ [X]. 복수국적 상호간 보호권을 발동할 수 없으나, 일방에 타방에 대해 '지배적 국적국'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권이 인정된다.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 ①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②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 ③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④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④

해설:

①[O]

②[O]

③[O].부부국적독립주의에 대한 규정이다.

④[X].「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4.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6년 9급>

①「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③「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핵무기의 실험·생산·비축·배치·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다.

정답:③

해설:

①[O]. 조약에 의하면 핵무기 비보유당사국들은 핵무기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사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②.[O].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1996년 당시 핵무기 또는 핵연구용 원자로 등 핵 관련 시설을 보유하여 부속서 2(Annex 2)에 열거된 44개 특정 국가 전원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발효된다. 현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은 미발효중이다.

③[X].핵무기금지조약은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고 유보는 금지되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는 경우 탈퇴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통보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O]. 중남미 비핵무기지대 조약(1967, 틀라텔롤코 조약), 남태평양 비핵무기지대 조약(1985, 라로통가 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1995, 방콕 조약), 아프리카 비핵무기지대 조약(1996, 펠린다바 조약),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2006, 세미팔라틴스크 조약)은 지역적으로 핵무기의 실험·생산·비축·배치·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조약들이다.

15.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6년 9급>

①「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②「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

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③「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④「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정답:②

해설:

①[X].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은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을 뿐 자위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나 그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규정을 두지 않아 자위권은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②[O]. 국제연맹규약 제16조는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모든 회원국이 경제·금융 관계를 단절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Should any Member of the League resort to war in disregard of its covenants under Articles 12, 13 or 15, it shall ipso facto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act of war against all other Members of the League, which hereby undertake immediately to subject it to the severance of all trade or financial relations, the prohibition of all intercourse between their nationals and the nationals of the covenant-breaking State, and the prevention of all financial, commercial or personal intercourse between the nationals of the covenant-breaking State and the nationals of any other State, whether a Member of the League or not.”).

③[X]. UN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에는 좁은 의미의 군사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제재위협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X]. 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Drago의 드라고 독트린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 열강의 무력적 채무회수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원칙이다.

1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①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②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의 철회를 위해서는 해당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는 모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정답:②

해설:

① [O]

② [X]. 유보 철회를 위해 수락국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O]

④[O]

17.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①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④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O]

②[O]

③[O]

④[X]. 남극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여하한 행위 또는 활동도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극지역에서의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1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6년 9급>

①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③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익이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X]. 군함과 군용항공기도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②[X].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무해통항권만 인정된다.

③[X]. 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 또는 통과통항이 허용된다.

④[O]

19.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은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당사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대시켜야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민간 및 공공기구도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에의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청정개발체제에 참여를 허용한다.

정답: ②

해설:

① [O]. 당사국이 오존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몬트리올의정서'(1987)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X]. 파리협정 제6조에 의하면 국가결정기여(NDC)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 간 완화 성과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파리협정에서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완화성과(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란 한 당사국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저감 성과를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여 그 국가의 국가결정기여(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감축 실적 단위를 의미한다.

③ [O]

④ [O]. 교토의정서 제12조 제9항의 규정이다.

20.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9급>

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 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③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10조 제1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틀린 문장이다.

② [O]. 협정 제12조 제4항.

③[O]. SCM 협정 제27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수출보조금 금지 및 기타 보조금 규율의 적용을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특별·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④[O]. 협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